

영국의 최근 사회정책 환경과 연구교류 기반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국 방문 결과를 크게 몇 가지 점에서 정리함.

○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사회정책 환경변화와 영국의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학문적 교류의 경향에 대한 소견

- ‘영국 사회정책의 환경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이슈로 사회부조제도의 개혁으로 진행된 ‘universal credit의 초기결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정리를 시도
- 영국 사회정책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최근 영국의 정치적 환경과 영국 내 스코틀랜드와 같이 특정 지역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과 영국의 사회정책 이해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
- 사회부조는 UC의 최근 변화와 평가 그리고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 이와 더불어 영국의 학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정리하고 함의를 모색
- 학문적 이슈와 교류의 경향에 대해서는 인상과 소견을 다소 짧게 정리
- 이 부분에서는 공개 강의와 관련된 인상과 고려점을 함께 소개

<표> 영국 방문의 정리 개요

주제	이슈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	→ 최근 영국 내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의 정강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등
영국 내 사회정책 분권 관련	→ 스코틀랜드의 독립선거 이후 사회정책의 이양과 추후 전망
사회부조개혁의 평가와 전망	→ 사회부조의 최근 변화내용과 초기 평가
영국 내 학문적 교류 경향	→ 영어권 학자의 협력과 아시아권 학자의 협력 기반 마련 방식에 대한 소회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	→ 공개 강의의 다양한 형태와 시사점

□ 영국의 사회정치적 변화 전반의 개괄

- 영국의 사회정책이 과거와 달리 이상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악화되는 사회정책의 모델 중 하나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의 학자들이 갖게 될 입장도 고민거리 중 하나

1. 정치적 상황과 사회정책에 대한 논쟁

○ 보수당의 집권이 지속되면서 영국의 사회정책은 상당 수준으로 위축되어 왔음.

- 노동당 집권기에도 노동당은 과거와 다른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을 수용한 바 있음.

○ 최근에는 조기총선이 향후 사회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6월8일 조기총선이 단연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 중 하나.
 - 2년 만에 치르는 이번 조기총선은 메이 총리가 본격적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요청했고 노동당 등 야권이 이에 응하면서 예정된 것.
- 4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집권 보수당이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들에서 여전히 큰 격차로 노동당을 앞서고 있었음.
 - 5월 18일(현지시간) 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도는 45%로 32%인 노동당에 13%포인트 앞서고 있었음.
 - 여론조사대로라면 보수당이 하원 과반의석(현재 실질기준 17석)을 크게 늘리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음.
 - 맨체스터의 테러는 오히려 보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였음. 물론 최근의 런던 테러는 사전 경고를 놓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5월에 들어 노동당 지지도가 조금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 바있음.
- 보수당과 노동당이 총선평약집은 언론에서 보도, 해석 등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음. 공약집의 주 내용 중 큰 부분이 사회정책과 관련

○ 보수당의 공약집 주요 내용

- 1년간 무급간병제
- 연금급여 인상억제, 소득비례 강화
- 해외 이민자 진입 조건 강화 등

○ 노동당의 공약집 주요 내용¹⁾

- 7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노동당은 ‘좀 더 평등한 사회(A MORE EQUAL SOCIETY)’를 표방하면서 공약을 발표.
- 철도, 수도, 우체국 국영화
- 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
- 대학등록금 폐지
- 초등학교 무상급식
- 최근 총선 결과는 보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동당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음.
- 이 결과는 이후 블랙시트의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정당간의 의석 수 변화가 향후 사회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할 필요.

□ 사회정책 관련 논의 중 주요 주제

- 사회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영국도 인구노령화와 관련된 주제가 핵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음.
-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것이었는데 수치심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 노인의 근로유지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영국의 사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은 선진복지국가로서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 측면일수도 있으나 한편 사회정책이 위축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심화여진 것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음.

2.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이후 사회정책의 분권화

-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영국 연합왕국임(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²⁾).
- 행정구역은 네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이 서로 다르게 구성
-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구분되고, 또 다시 6개 메트로폴리탄 카운

1) <http://www.labour.org.uk/index.php/manifesto2017/social-security>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117&cid=40942&categoryId=34082> 2017. 5. 18일
인출

티(metropolitan county), 27개 카운티(two-tier county), 그레이터 런던 (Greater London)으로 이루어져 있음

- 스코틀랜드는 32개 주(council area), 웨일스는 22개 지방정부(unitary authorities), 북아일랜드는 26개의 주(District)로 구성.

○ 2014년 9월 18일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진행되었음.

- 개표 결과 독립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분리 독립은 무산되었음.³⁾ 당시 조세권/예산권을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에 넘기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분리에 반대.
- 당시 스코틀랜드 내 독립파의 공약
 - 최저임금 인상.
 -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삭감 복원.
 - 베드룸 택스 폐지 (베드룸 택스 폐지는 독립반대파도 공약사항)
 - 보다 공평한 복지망 확충으로 질 좋은 일자리 갖도록 지원.
 - 영국 의료보험시스템 NHS 유지 및 무상교육 유지.
 - 육아보조 강화.
 - 소득세 차별적 설정. (반대파도 공약)
 - 연금강화.
 - 장애인이나 아이들 돌봄에 대한 수당확대.
 - 생활비용 상승에 따른 세금 공제 유지.
 - 임금 인상 지원.
 -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노동자 권리 복원 등.
- 북해 유전의 발견이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독립을 가시화했고, 이것이 분리독립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음.
 - 최근 유가하락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추진하는 입장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
 - 독립을 어려워졌으나 당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영국 정부는 사회정책의 분권도 진행할 것으로 제시

○ 영국의 각 지역은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음.

- 가디언(theguardian)에 따르면 19세기까지 영국 각 지역마다 사회정책이슈에 대해

3) <https://namu.wiki/w/%EC%8A%A4%EC%BD%94%ED%8B%80%EB%9E%9C%EB%93%9C%20%EB%B6%84%EB%A6%AC%EB%8F%85%EB%A6%BD%20%ED%88%AC%ED%91%9C> 2017 5.

23일 추출

여 매우 다른 접근이 존재하여왔음. 특히 구빈정책에서는 그러하였음.

- 1929년 스코틀랜드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차기 보건부 장관인 Tom Johnston은 1845년 구빈법이 스코틀랜드 노동자계층에게 국가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었으나 이 권리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의 근로가능자에게는 부정되었으며 스코틀랜드의 구빈법체계가 자발적 노력에 계속 심하게 의존하여 왔다고 주장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신구빈법을 설계하는 정책관계자들은 열등처우원칙을 소개하여 근로능력자가 구빈에 의존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결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더 심하였고 결인에 대한 지출이 더 커졌음.
- 20세기에 들어서 좀 더 통일된 접근이 나타나 사회보장과 구빈은 점차 중앙집중화되었으나 보건과 교육은 여전히 별개로 관리되어왔음.
- 1906-14년 사이의 자유주의적 정부는 1908년의 노령연금을 수용하고 실업과 건강보험의 전국적 제도를 실시. 실업보험제도는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쳐 확대. 그리고 구빈의 역할을 줄고 1930년대 이후로는 공공부조이 역할도 축소. 1948년 국가지원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이 대영제국의 자산조사형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기틀을 마련.
-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이러한 과거 경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916년 말 Smith Commission 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상병급여, 장애급여, 사회기금, 자유재량적 주거급여에 대하여 새 권한을 이양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 이 위원회는 유니버설크레딧 급여의 빈도, single-household payments, landlords' payments, housing allowance rates deductions for non-dependants and the bedroom tax.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이양할 것을 제안⁴⁾.
- 이 모든 제안은 영국 정부로부터 수용되었으며 스코틀랜드 법의 초안에 반영되었음.
- 스코틀랜드 장관 Alistair Carmichael은 백서를 준비하면서 매년 약 2.5bn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스코틀랜드 복지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을 요구
-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사회급여가 여전히 영국 정부에 남아있게 됨.
- 영국에서 2015/6 기준으로 2000억 파운드를 급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이 중 9.1% 183억 파운드를 스코틀랜드 인의 급여를 위하여 지출⁵⁾

4) https://en.wikipedia.org/wiki/Smith_Commission

5) Social Security for Scotland: Benefits being devolved to the Scottish Parliament, March 2017.

- 371백만 파운드를 Council tax reduction scheme and Scottish welfare fund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187억 파운드를 스코틀랜드 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 지출하는 것
- 2000억 파운드 중 15.3%인 23억 파운드를 스코틀랜드 정부로 이양할 계획

○ 현재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사회정책의 배경에서 다소 상이성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현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석수구성이 상이
 - 잉글랜드의 경우 테레사 메이와 이끄는 보수당이 다수당, 제레미 콜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제 2당
 - 스코틀랜드는 이와 상이하여 니콜라스 터전이 이끄는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다수당. 그리고 노동당이 또 다른 다수당 보수당 의석수는 노동당과 유사한 수준
- 스코틀랜드지역은 잉글랜드 지역과 종교적 배경이 다소 상이.
 - 가톨릭 전통이 강하여 이로 인한 빈곤층 지원 자선단체가 많고 종교적 배경의 지원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님.
 -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도 많은데 빈곤층을 대변하여 정부 지원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의 기능 중 하나

○ 스코틀랜드는 향후 다시 독립투표를 실시하고자 함.

- 과거 투표시기와 분위기가 상이하다고 판단.
-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연령 조건은 16세 이상으로 되어 영국 정부와 다소 다른 투표권자를 확보하고 있음.
- 이는 젊은이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여 각종 투표, 정책참여에서 노령층과 젊은층의 힘의 균형, 의견수렴구조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투표에 대하여 일부 여론은 'grey vote'라고 비아냥하기도 함.
-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투표권인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예를 들어 수감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일부 교회는 홈리스에게 주소를 제공하여 주고 이를 기반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 에딘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연구자 면담 내용

-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사회정책분야 연구자 면담. 해당 연구자의 주 연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사회정책의 수행.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회정책에 대하여 연구한 경험이 있고 스

코틀랜드 정부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면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분권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미 지방정부의 책임영역에 있었거나 그 수급자 규모가 매우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심지어 소멸된 지원도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지적. 상황이 이러하니 실제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이 분권과정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상황.
-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자면 주로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가 분권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약 20년 전에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분권이 진행된 바 있음(Mooney and Wright, 2009⁶⁾ 참조). 이 당시에 이러한 분권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 분권도 근로와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한 권한이 그대로 Westminster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 이미 분권된 돌봄과 NHS와 관련된 급여와 서비스가 분권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 분권에서는 이양되는 서비스와 급여를 감당할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세금에 대한 자율권도 이양되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이양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세금이 영국 중앙정부로 모이고 이를 영국 정부가 지역별로 할당하고 있어 실질적 분권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음.
- Universal credit의 행정적 책임이양도 거론되었으므로 이 진행을 확인
 - 하지만 UC에 대한 행정책임의 이양에 대한 전망을 그리 밝지 않다는 전언
 - 이유는 UC가 실제로 면대면 상담이 진행되는 확대고용센터(Job center Plus)사 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콜 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행정책임을 이양한다는 것이 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
 - 콜센터는 현재 영국 전국에 3곳이 있지만 모두 잉글랜드에 위치한다고 함.

〈참고〉 UC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유리된 지속적 악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

6) Mooney, Gerry & Sharon Wright, 2009. Introduction: Social Policy in the Devolved Scotland: Towards a Scottish Welfare State?. Social Policy and Society 8.3. 361-365.

- 학자들 사이에 영국의 UC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보임.
 -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UC를 더욱 열악한 지원으로 계속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이 UC를 잘 모르고 수급자조차도 본인들이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UC인지 모르기도 하며 이러한 무관심이 영국 정부가 제도 개선 압박을 받지 않는 주 이유 중 하나라 설명
 - UC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구단위로 합하여 운영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석
 - 학자들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더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적절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임. 고용불안정으로 고용, 근로빈곤, 실업의 자료를 생산, 축적하기 어려워진 것
 - 과거 tax credit이 중요한 자료의 원천이 되었는데 동 제도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어서 자료 원천으로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 한편 최근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양호하지 않는데 특히 최근 오일가격이 낮아 유전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기반은 더 어려움 상황.
-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웨일즈와 다른 사회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가 좀 더 관대한 것이었으나 현재 스코틀랜드 주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가 더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함.
-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주민의 사회적 태도는 영국 다른 지역, 잉글랜드 등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함. 물론 이슈별로 그 태도가 다소 상이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
 - 특히 스코틀랜드의 주민들은 NHS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이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높은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
 - 이러한 우려는 실제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공의 주관적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적지 않다고 비판
- Smith Commission이 제안한 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됨.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이양 대상 급여와 서비스가 소수의 주민과 관련된 것들이고 예산 비중도 낮은 것들일 뿐 아니라 근로자와 그리 관계가 없는 것들

이였음.

- 그럼 '왜 Smith Commission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분권을 제안하였을까?' 이유는 영국 정부의 속내를 미리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이를 고려한 타협이라 해석
- 영국정부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시도에 대하여 일종의 대안으로 더 많은 자치를 수용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지만 속으로 그리 많은 것을 내어줄 의도는 없었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제안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영국 정부의 태도를 고려한 타협이었다는 것임.

- 향후 분권에 대한 전망은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 향후 이루어질 주요 선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예를 들어 블랙시트, 스코틀랜드 독립선거 등
- 최근 영국의 언론은 스코틀랜드가 향후 EU에 단독으로 잔류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음.
- 다양한 면에서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 이후 더 적극적인 독립행보를 하고자 함.
- 하지만 EU 회원국 중 적지 않은 수 국가들이 자국 내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고민을 하는 중이라 EU도 스코틀랜드의 시도를 적극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
- 향후 스코틀랜드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적어도 영국의 사회정책 통계를 다룰 때는 이 점을 주의하며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3. 사회부조 개혁에 대한 평가와 제도변화의 전망

○ 대표적 사회부조제도인 UC는 아직도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변화의 기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빈곤층의 개인책임을 강조한 것

○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의 지원으로 변경한 것도 빈곤층의 상호 부양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2015년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정부 지출을 120억 파운드를 절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이 계획에는 tax credit와 UC, 그리고 일부 급여들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음.

- tax credit 소득기준을 낮추었고 2016년 이후 UC에서 근로수당을 줄였음. 2017년 이후 tax credit, UC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와 가족에 대한 고려도 줄였음.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2017년 이후의 신청자는 두 번째 아동까지만 고려.

- UC에서는 2016년 이후 근로수당을 줄여 근로동기를 강조한 UC의 의미가 퇴색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동기 강화가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

□ UC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University of York 교수)의 발표와 논의를 정리.

- 해당 연구자는 UC의 초기 평가를 위한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기금의 5년 프로젝트를 수행 중. 동 연구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정책관계자, 일선 정책실무자, 그리고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로 기획됨
 - 그러나 연구준비과정에서 일선 정책실무자 면담 협조에 대하여 연금노동성으로부터 거절당함
- 현재 연금노동성은 주로 취업, 일시간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 성과자료를 발표 중에 있음.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도변화가 빈곤층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 보고서 중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2017년 April 기준으로 UC 수급자의 60%는 근로조건을 부과받은 사람들임
 - 구직, 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계획을 한 수급자는 2016년 이후로도 계속 증가 중이라고 DWP는 통계자료로 소개
 - 수급자의 2/5는 취업자임.
 - 최근에는 제재(sanction)도 증가 중
- 이러한 상황에서 UC 시행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인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연구 중 하나라고 판단

○ 수급자 면담을 기초로 몇 가지 점을 지적

- 기초가 되는 핵심 내용은 UC의 conditionality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sanction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함. 주당 35시간의 구직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⁷⁾. 이 구직시도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흔적이 남아야 함.
 - 그런데 coach와 면담시간이 현재 하는 일 시간과 겹쳐 상담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제

7) 만약 주 16시간 일을 하는 상태이면 19시간의 구직을 증명하여야 함.

재를 받게 됨.

-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에도 정해진 구직 시간, 즉 일자리 검색 시간을 채워야 함. 이는 현재 일을 하는 수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수급자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상담과정은 대개 10여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급자나 신청자의 상당수는 상담에 임할 때 압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고 함.
- 영국 정부가 선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시간은 없고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coach는 계속 무언가 서명을 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빈번. 따라서 신청자들은 개별화되지 못한 채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제재를 받을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 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선의 상담인력을 줄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됨.
- 급여지급방식의 변화도 수급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 변화
- 과거 1주 단위, 주거급여는 임대인에게 지불한 급여방식에서 UC는 개인책임을 강조하면서 한 달 단위 지급, 임차인에게 주거급여 지원으로 변경
- 이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도 관건인데 편지로 이 변화를 전달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방식. 따라서 수급자들은 복잡한 제도를 이러한 편지통보로 이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혼란을 경험.
- 예를 들어 급여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좋아하고 일찍 급여를 다 소진하거나, 주거급여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이를 소비하여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한 사례가 다수
- 제재를 받게 되면 지방정부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수급자는 극단적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일부는 자살한 사례도 있고 일부는 ‘나 다이엘브레이크’에서 처럼 매춘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

4. 영국 연구자와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상

- 영어권 학자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이러한 교류만으로도 학문적 축적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
-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서 유럽의 여타 국가의 학자 뿐 아니라 주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북미 학자, 호주와 뉴질랜드 학자와의 교류 등이 매우 활발한데 교류하는 학자들의 범위,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교류가 돋보이는 국가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음.
- 일본은 과거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음. 최근의 전반적 교

류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하지 못하였으나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교토-옥스퍼드 prize'가 있었으며 올 해 세 명의 학자가 이를 수상하고 이를 기념하여 옥스퍼드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한편 중국은 큰 규모의 투자가 학문영역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목격됨. 옥스퍼드 대학에도 새로 큰 건물을 세우고 이를 중국연구센터로 사용하게 되었음. 이 전에는 해당 위치에 아시아 연구센터가 있었음. 아시아 센터는 작은 옆 건물로 이동하고 이 자리에 중국연구센터가 들어선 것임.
- 영국의 런던에 중국자본의 유입이 더 실감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큰 규모의 빌딩에 중국은행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중국자본이 런던의 건물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여 런던의 주택 임대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가 전하였음.
- 영국의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과제

5. 최근 연구주제와 연구와 논의의 장의 연결

- 최근 영국의 사회정책 분야에서 사회적 태도, 공공지식(public knowledge), 그리고 빈곤층의 수치심, 낙인이 연구주제로 부상
- 선진복지국가로서 빈곤층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기도 하지만 과거 몇 십년간 악화된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이 주제를 둘러싼 연구를 촉발하는 것으로 판다.
- 공공지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이러한 관심은 주로 국민의 사회적 태도에 대한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 즉 왜 국민들이 사회정책에 특정 태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 이유로 공공의 지식이 영향을 준 점에 주목. 공공의 인식은 반드시 사실, 객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
- 현재 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별로 뚜렷하지 않음. 특히 정치권이나 정책관계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다만 녹색당(Green Party)만 공약 속 에 이 개념을 다루고 있음.
- 영국의 대학들은 적지 않은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음. 물론 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지만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고 없지는 않음.
- 공개강좌나 세미나의 운영은 당연 학교마다 다른데 옥스퍼드대학은 주로 낮 시간에 공개강의를 하고 있었음. 반면 런던의 LSE의 경우 도시에 있는 대학이어서 일반인 참여가 저녁시간에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인지 일과이후 시간, 즉 6시 30분경에 공개강의를 시작하고 있었음.
- 대학이 공공성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만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준공공의 연구기관도 향후 대중,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통로로 정책적 지식이나
논의를 공유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역할 모색으로 판단.